

■ 국감 첫날 여야 기선잡기 팽팽 ... 상임위별 쟁점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감대책회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격해지자 고홍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내리치던 도중 의사봉의 머리부분이 뒤로 날아가자 황당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새해 예산안 연계 처리키로

야 5당 합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4대강 관련 예산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4대강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를 지방예산과 복지·교육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적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원안 추진을 지원키로 했으며, 대북 쌀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즉각적인 추진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조만간 한나라당에 특위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무위 “鄭총리 세종시 이중적 발언 사회 혼란 야기”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5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세종시 법 위반 유지 여부와 용산 해법 등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10·28 제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민생 국감'을 표방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버리고 있어 여야 간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세종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법 위반을 수정해선 안된다'고 정부와 야당을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 총리가 세종시와 관련된 이중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증대의 기본인데, 이래서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될까?”라고 따지며 조속한 시일 내에 '9부 2처 2청'의 이전 변경고시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행정복

외통위 “북핵 일괄 타결 그랜드 바겐 비현실적”

문방위 미디어법 통과 대책 논의 놓고 여야 설전

합도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업복합 도시 등 산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정 총리의 수정 추진 입장을 거들었다.

특히, 야당은 지난 3일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과 관련, “중앙정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공개 사과 ▲유가족 보상 및 장례비 지원 ▲검찰 수사기록 공개 ▲공권력 남용 경찰 문책 등을 요구했다.

◇문방위=미디어 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결을 치른 바 있는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날 당정회의에서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대책을 논의한 것을 놓고 ‘국감 사전모의’라고 몰아붙였고, 이에 한나라당은

당정이 중요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면서 1차례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정병헌, 조영택 의원은 지난날 진행했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아마추어’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국무총리 부인의 미술품이 평균 1천200만원 가량이 팔렸던 점을 들어 ‘뇌물’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과상 공세를 펼쳤다.

◇외통위=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일괄타결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북핵 일괄 타결방안인 그랜드 바겐 정책이 미국과 조율이 되지 않은 정책인 데다 비현실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랜드 바겐 정책이 과

거보다 유연해진 정책이라고 옹호했지만, 일부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통일업무를 관장했던 무소속 정동영 의원과 외교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유명관 장관의 대북관과 ‘그랜드 바겐’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위=여야 의원들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성(姓) 보호 주무부처 중 하나지만 나영이 사건에 대해 어떤 브리핑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아들로 성에 대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는 화학적 거세를 캐나다에서 얘기하고 있다”며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거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회 장관은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지금의 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 나머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최근 사회회 관심이 높아진 안산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거더라도 이사를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최근 사회회 관심이 높아진 안산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거더라도 이사를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별민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내년 지방선거 참여 고민”

야권 미묘한 파장

박원순 변호사(회맹제자소 상임이사)가 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영남 출신의 대표적 진보 인사인 박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대중 인지도와 참신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가 실제로 현실 정치에 뛰어 들 경우 인물난에 시달리지는 야권의 역할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피소당한 박 변호사는 이날 진보성향의 야당 의원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 주최 초청강연에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활동가로서 지금껏 활동해 왔던 원칙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

게 됐다”며 “지방선거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낙선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객관적 영역에만 머물렀지만 이제부터 좋은 정부를 만드는 ‘큰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 안팎에 선 박 변호사가 제도권 정치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인사는 “박 변호사의 명망과 깨끗한 이미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서울시장 출마 결단을 한다면 당으로선 희소식”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농수산위 국감 현장

국회 농림수산업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에서 농협과 수협의 도덕적 불감증과 방만·부실 경영을 집중 추궁했다.

농어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수협이 골프와 콘도 회원권 구매에 수백억 원을 쓰고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했을 뿐 아니라 접대비로 수십억 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점 등이 거론됐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이날 “농협 중앙회에서 최근 3년간 35명이 공금을 횡령했으나 이 중 8명만 형사고발됐다”며 “습관방이 처벌이 부정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금융위기 등 경제난 여파에도 농협 자회사 임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

농협, 골프장 회원권 등 구매 857억

수협, 접대비로 年 38억~48억 써

는 전년도보다 6.8%가 인상돼 1억7천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농협은 2001~2008년 외화증권에 투자한 8억5천500만 달러 중 65%인 5억5천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농협은 가격이 인상된 이후 재고 비료를 인상된 가격에 판매 118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지금이라도 차익을 농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과 농촌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농협과 농협 자회사들은 골프장·콘도 회원권 구매에 857억원이나 사용했다”며 “농정 활동의 현상이 골프장이나”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지나해 시작된 농기계은행사업이 향후 5년간 3천8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농협이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리비 예산을 카드깡, 식비로 사용하는 등 불·탈법 행위가 관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5~2007년 매년 접대비로 38억~48억 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상당액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해 법정 접대비 한도액인 2억8천 100만~3억9천700만달러도 9~17배나 많은 수치다.

수협중앙회는 특히 2005년 유흥업소 이용이 원천 봉쇄된 클럽카드제를 도입했으나 단란주점 등은 사용제한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유흥업소에서 4천295건, 8억9천50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2004~2008년에 접대비 가운데 4천700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면서 50만원 이하 금액으로 2~3회에 걸쳐 나눠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The main headline reads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If you want to pass, go through Hanbit Gosi Academy!!). Below this, it says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10's exciting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starts now at Hanbit). The central focus is '79% 공무원 합격의 힘!' (The power of 79% public servant exam success!). It details a '79%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79% comprehensive 9-hour daily lecture) and '기능직특채 찍어주기 "하루특강"' (Special training for functional jobs 'one-day special lecture').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11.2 개강' (Starting 11.2) and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Academy)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branch (234-9234).